

2020. 11. 02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출처 ) 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12325>

( 요약 ) SK그룹 8개사, 한국 최초 RE100 가입..."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 글로벌 전기차 OEM 및 기관투자자들의 요구 감안 RE100과 동일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
- 더 클라이밋 그룹은 화석연료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는 가입 대상 제외, 가입조건은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SK 그룹 8개 관계사가 한국 최초로 'RE100'에 가입한다.

1일 SK에 따르면 SK(034730)주식회사, SK텔레콤(017670), SK하이닉스(000660), SKC(011790),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036490),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티테크놀로지 8개사는 오는 2일 한국 RE100 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SK E&S, SK에너지, SK가스(018670) 등 가입 대상이 아닌 관계사들은 자체적으로 RE100에 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인 RE100은 기업이 오는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영국 런던 소재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지난 2014년 시작했으며, 10월 기준 구글·애플·GM·이케아 등 전세계 263개 기업이 가입했다.



SK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은 회사단위 가입 조건에 따라 금번에 가입은 못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OEM 및 기관투자자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RE100과 동일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한다. 더 클라이밋 그룹은 발전이나 정유·석유화학·가스 등 화석연료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자체심사를 거쳐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가입으로 SK그룹은 최태원 SK회장이 지난달 CEO 세미나에서 미래 성장전략 중 하나로 강조했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중 환경(Environment) 부문의 실행을 가속화하게 됐다는 평가다.

최 회장은 그동안 그룹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로 ESG를 지속 강조해왔다. 지난 2018년 그룹 CEO 세미나에서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라"고 한 바 있다. 지난 10월 열린 CEO 세미나에선 "친환경 노력은 모든 관계사가 각자의 사업에 맞게 꾸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지난 9월엔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ESG를 기업 경영의 새로운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SK 8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된다. RE100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 받게 되며,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100%로 늘리게 된다.

이형희 SK SUPLEX 추구협의회 SV 위원장은 "이상기후 등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발생량을 줄이자는 친환경 흐름에 한국 기업 또한 본격 참여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에너지 솔루션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작은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20. 11. 02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b>( 출 처 ) 조선비즈</b> <a href="https://news.naver.com/article/366/0000612371">https://news.naver.com/article/366/0000612371</a>	
<b>( 요 약 ) '원전 없는' 탄소중립 선언한 정부 "LNG사용 증가·전기료 인상 불가피</b> -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원과, 주변인 석탄의 비중을 대폭 낮춰, 국민과 기업 비용 급증 - 코로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협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환경규제까지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거란 우려의 목소리	
<p>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정부의 탈(脫)석탄과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야심 찬 목표다.</p> <p>현재로서는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숙제다. <b>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無)탄소 에너지원인데, 정부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뿐 아니라 원전 비중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두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b>된다.</p> <p>특히 값싼 발전원인 원전과 석탄을 퇴출하고 발전 단가가 높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b>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협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환경규제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b>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p> <p>◇ 탈원전하면서 탄소중립...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p> <p>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탄소 중립 추진과 시기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그동안 높은 탄소배출량과 해외 석탄발전 투자 등을 이유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번 선언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뒤늦게 동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p> <p>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을 최대한 빨리 재생에너지나 원전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거나 기존 발전소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기술을 당장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 '2060 탄소중립' 목표를 세운 중국은 태양광·풍력만으로는 석탄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2050년 석탄발전 비중은 5% 아래로 떨어진다.</p>	

<p>문제는 태양광·풍력은 발전단가가 석탄, 원전보다 높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는 아직 단독으로 사용할 만큼 안정성이나 효율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 날씨, 계절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보완해줄 발전원이 필요하다.</p> <p>결국 석탄과 원전의 공백을 LNG가 메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LNG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LNG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데다 공급과 가격 변동성이 커 LNG 의존도가 높아지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LNG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p> <p>◇ 기업 70% "환경규제 부담 크다"</p> <p>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등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p> <p>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2.9%가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할 경우 환경규제 강화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시설 개선 투자비용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도 등의 지원책이 대표적"이라고 했다.</p> <p>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지난달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40% 감축만 해도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종의 저탄소 전환비용이 4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p> <p>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어느 정도 비용 감수는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급속하게 추진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p> <p>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석탄발전소에 탄소포집저장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	--

## ( 출처 ) 데일리안

기사링크

## ( 요약 ) 전기차 굴리고 남은 배터리...현대차가 주목한 이유는?

- 2050년 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약 600조원으로 성장 예측...재활용 산업은 재활용방식과 재사용방식으로 구분
- 환경오염 방지하고 원료 및 원재료의 구입비용이 크지 않아 추가비용이 적게 드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주목 必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기차에서 사용하고 수명을 다한 '사용 후 배터리'가 미래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관련업계는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성과 친환경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사용 후 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초기 대비 약 80% 이하로 감소해 전기차 구

동 배터리로서 활용 가치가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주행거리 감소, 충전·방전 속도 저하, 급속 방전 리스크 등 문제로 교체가 불가피하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덴 문제가 없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오는 2026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배출돼 2030년까지 약 10만 대 분량이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계적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는 **2050년 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약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크게 배터리를 분해해 고가 소재를 추출·재활용하는 '재활용' 방식과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용으로 활용하는 '재사용' 방식으로 구분된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이 핵심원료로 함유돼있다. 이들 원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그대로 폐기하면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그러나 배터리 '재활용'이 이뤄지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값비싼 원료의 소모량도 줄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한 대당 니켈과 코발트만 추출한다고 가정하면 약 100만원의 가치가 있다"며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감안해도 원재료 구입비용이 크지 않아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터리 '재사용'은 배터리 팩을 수거해 해체 및 안전 테스트 등 절차를 거쳐 다시 상품화한 뒤 판매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세밀한 단계의 해체가 필요하지 않아 안전하고 추가 비용이 적게 드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꼽히며, 특히 현대자동차가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 관계 구축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9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 10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허가했다. 현대자동차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한 뒤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에 활용하는 사업의 실증에 나섰고, LG화학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를 급속 충전할 수 있는 ESS의 제작 실증을 수행한다.



또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은 지난 9월 전기차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사업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찾기로 했으며 '니로EV'의 배터리 팩을 수거해 검증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5월에는 현대차와 한화큐셀이 태양광 연계 ESS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사용 후 배터리와 태양광 시스템을 연계한 친환경 ESS 신사업을 발굴해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는 사용 후 배터리로 만든 ESS를 한국 공주시와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OCI의 태양광발전소에 설치해 사업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용 후 배터리 사업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며 "이같은 친환경성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율이 30%가 넘는만큼 사용 후 배터리의 차량 재장착이 가능해지면 전기차 생산 비용도 대폭 낮아질 것"이라며 "전기차가 보급단계를 지나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0. 11.03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

( 출처 ) 뉴시스

[기사링크](#)

( 요약 ) [블록체인 오딧세이] 디지털 화폐전쟁 서막...중 이어 EU·日も 속속

- CBDC란 블록체인(분산저장)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 및 보증하는 전자화폐...중국이 CBDC 개발 선도 중
-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이에 걸맞은 지불결제 수단의 개발을 위해 각국이 CBDC연구개발 경쟁



[서울=뉴시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이른바 '디지털 위안화(E-CNY)'의 모습. 인민은행은 지난 12일 광둥성 선전시 정부와 협력해 이날 오전 시민 5만명에게 각각 200위안(약 3만 4000원)씩, 총 1000만 위안(약 17억원)의 디지털 위안화를 뿌렸다.

세계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의 '법정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개발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제1위 기축통화국 미국이 주축한 사이 G2국가인 중국이 CBDC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유럽과 일본의 추격도 눈에 띈다. 1일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80% 이상이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에 돌입했다.

CBDC란 블록체인(분산저장)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 및 보증하는 전자화폐이다.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수요 변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지폐나 동전처럼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발행 주체가 민간이고, 시장가격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PIDC: Privately Issued Digital Currency)와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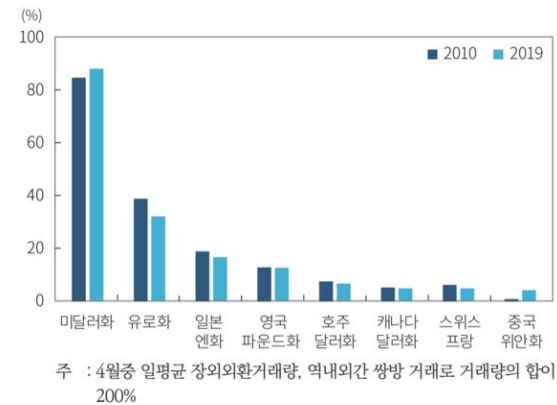
미국은 달러 패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에 신중한 입장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장은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미국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극적인 미국과 달리 주요국들의 CBDC 개발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가장 앞서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CBDC를 연구하기 시작해 현재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대도시에서 '디지털 위안'을 시범 운영 중이다.

특히 이달 초에는 중국 광둥성 선전시와 함께 시민 5만명에게 총 1000만 위안(약 17억원)의 CBDC를 추첨을 통해 200위안(약 3만4000원)씩 지급, 슈퍼마켓 음식점 등 상업시설 3389곳에서 쓰도록 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디지털 위안화 발행 시점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디지털 화폐를 실제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되겠다는 목표다.**

제2 기축통화국인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초 디지털 유로 발행에 대한 공개 논의를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늦어도 내년 중반까지 디지털 유로를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ECB의 생각이다. 지난 9월에는 디지털 유로의 상표 등록도 출원한 바 있다.

전세계 외환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의 비중 변화



한국도 내년에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 7월까지 1단계로 CBDC 설계와 기술검토를 마쳤다. 이어 2단계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거쳐, 내년 중 3단계로 발행은 한은이 맡고 유통은 민간이 하는 현금유통 방식의 시험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렇듯 각국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이에 걸맞은 지불결제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디지털 화폐 개발에 기름을 부었다. 또 민간에서 가상화폐 개발에 속속 뛰어들자 통화당국으로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 라는 목적도 있다.**

아울러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G2 중국이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서두르는 것도 각국 중앙은행이 CBDC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유럽과 일본은 디지털 경제 시대 기축통화국 지위를 중국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CBDC 시장을 선점해 향후 국제금융시장을 선도하거나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셈법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2020. 11. 04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출 처)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165606?sid=101>

### (요 약) 트럼프? 바이든?...美 대통령 누가 당선돼야 韓 반도체 웃을까

- 국내반도체 업계, 미중 무역분쟁에 불확실성 확대

- 미 대선 결과에 촉각..."트럼프 재선 시 반사이익" vs "별 영향 없을 것"

지난 3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미 대선 결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때리기'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인 가운데, 정권 연장 혹은 교체 시 각각 다른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다.



관련 업계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중 갈등이 심화해 국내 반도체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누가 당선되든 중국에 대한 견제 분위기가 이어져 당장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 ◇ 국내 반도체 업계, 미중 무역분쟁에 불확실성 확대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에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된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시작한 이후 국내 기업 중 미국 상무부로부터 공급 승인을 받은 곳은 삼성디스플레이뿐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화웨이에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중 일부 품목의 수출 허가를 받았다. 다만 또 다른 패널 제조사인 LG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아직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사용해 지난 8월 17일 이후 신규로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9월 15일부터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미국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반도체가 없는 만큼 이번 제재는 사실상 화웨이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미국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SMIC 및 자회사로 특정 기술을 수출하려면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생산을 맡기던 대만 TSMC와의 거래가 끊기자 대안으로 SMIC와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잇단 제재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판단해왔다. 우선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반도체, 부품 업체들은 신규 거래처를 확보까지 단기적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의 5대 공급사 중 한 곳이며 SK하이닉스 매출의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SMIC의 기술 확보를 늦추고, 고객사 확보가 쉬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화웨이 점유율 일부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 ◇ 미 대선 결과에 촉각..."트럼프 재선 시 반사이익" vs "별 영향 없을 것"

반도체 업계는 미중 무역 분쟁을 비롯해 코로나 19, D램 가격 하락 가능성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 대선 결과가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미중 기술 냉전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기업의 기술력 확보 등이 어려워져 결국 한국 기업이 이득을 얻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미국의 제재 강화가 중국 기술 굴기에 제동을 걸어 한국 업체의 시장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재선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경우 중국 IT 기업 제재는 한국 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내 업체 입장에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 진영 모두 대중국 정책에 대한 기조는 비슷하며, 전체 산업계에서 반도체의 위상을 감안할 때 미 대선으로 크게 판도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한국 기업들이 양국 사이에서 긴장 상태를 이어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반도체 전문가는 "미 대선 결과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중국에 대한 제재를 바로 풀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안보와 관련이 깊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며 "대선 결과에 따라 현재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또한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견제 분위기는 일관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국내 반도체 업계가 산업구조상 국제 정세에 취약하지만, 기술력 강화와 정책적 뒷받침을 통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앞선 전문가는 "미 대통령이 바뀐다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고 중국에 수출하는 현재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은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들여 꾸준히 소재부품장비 강화에 나서야 하며 정책적 뒷받침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소장은 "한국 산업계는 미국과 중국 간 경제 전쟁 중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멀리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 입장에서 정석대로 미래 기술 트렌드를 읽고 기술 우위에 서며 끊임없이 좋은 제품을 내놓고, 반도체 기술 기반의 파생 기술을 확대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성공법이며 정치적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11. 04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 출처 )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88075>

## ( 요약 ) 전세난에 밀려난 세입자, 저가아파트 '패닉바잉'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서울 저가 아파트값 상승률이 고가 아파트값 상승률의 2배
- 전세난 등 여파로 서울에서는 외곽 지역의 중소형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가격이 올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서울 저가 아파트값 상승률이 고가 아파트값 상승률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전세가 상승으로 살고 있던 집에서 밀려난 '전세난민'이 서울 외곽 저가 아파트 매수로 돌아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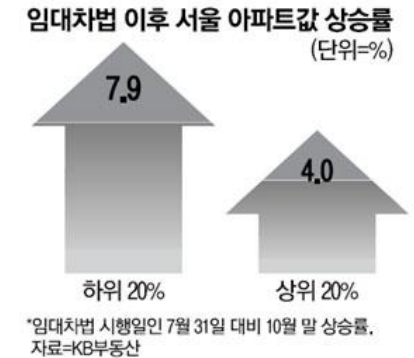
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5638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7월 4억2312만원보다 79% 올랐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이 18억4605만원에서 19억2028만원으로 40%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2배에 달한 것이다.

실제로 m<sup>2</sup>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개월 사이 6.6% 올랐지만, 도봉구는 상승률이 11.0%에 달했다. 노원구 역시 10.3%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3개월간 상승률 상위권 지역은 △강북구(9.6%) △중랑구(9.4%) △성북구(8.2%) △은평구(8.6%) 등 모두 외곽 지역이 차지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셋집만 찾던 세입자들이 전세난에 지쳐 매수로 돌아선 것 같다"며 "원래 살던 집 보증금 수준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소형 저가 매물을 많이 찾지만, 이마저도 매물이 없어 전셋값이 오르고 집값도 덩달아 오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42로 2017년 5월(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값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클수록 가격 차이가 심하다는 의미다. 통상 5분위 배율이 낮아지는 것은 주거 양극화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최근 5분위 배율이 내려간 것은 저가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고가와 가격 차이를 좁힌 것이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난 등 여파로 서울에서는 외곽 지역의 중소형·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가격이 오르고, 교통·여건이 좋은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는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1분위 아파트값은 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억2000만~2억5000만원 수준에 머무르다 2015년 12월 2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2년 만인 2017년 12월 3억원, 2018년 12월엔 3억5000만원을 각각 돌파하며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올해 6월 처음 4억원을 넘어서더니 이후 4개월 만인 지난달 4억5000만원 선을 빠르게 넘는 상황이다.

2020. 11. 05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

( 출처 ) 매일경제

[기사링크](#)

( 요약 ) "바이든 6명 남았다"...네바다서 승리하면 270명 확보

- 조 바이든, 선거인단 6명만 더 확보하면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현재 네바다주에서 트럼프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
- 트럼프, 현장투표 개표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우편투표 개표 시작하며 바이든에 역전당해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270명에 6명만 남겨두고 있다.

AFP통신은 5일 바이든 후보가 6명만 추가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확보한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재선 도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거인단 6명이 걸린 네바다주에서만 승리하면

바이든 후보는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으로 4일 오후 5시15분(한국시간 5일 오전 7시15분) 현재 86%의 개표가 이뤄진 네바다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49.3%로 트럼프(48.7%)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현지시간)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 확보에 충분한 만큼 여러 주에서 이기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체이스센터에서 연설을 통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주들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270명에 6명만 남겨두고 있다.** AFP통신은 5일 바이든 후보가 6명만 추가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확보한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재선 도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거인단 6명이 걸린 네바다주에서만 승리하면 바이든 후보는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으로 4일 오후 5시15분(한국시간 5일 오전 7시15분) 현재 86%의 개표가 이뤄진 네바다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49.3%로 트럼프(48.7%)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현지시간)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 확보에 충분한 만큼 여러 주에서 이기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체이스센터에서 연설을 통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주들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2020. 11.05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

( 출처 ) 뉴시스

기사링크

( 요약 ) 코로나로 기업들 울상인데..네이버·카카오 '역대급 실적'에 쾌재

- 카카오와 네이버, 각각 3분기 매출 1조원 2조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 양사 모두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수요와 맞물려 신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이 사상 최대 실적 이끌어

NAVER

kakao

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기업이 실적 벼랑에 직면한데 반대 국내 양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3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추포를 날렸다.5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

오는 올 3분기에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동시에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카카오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1조1004억원으로 전년동기비 41%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다.2017년 2분기부터 14분기째 최대 매출 기록을 다시 썼을 뿐만 아니라 1조원대 매출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02억원으로 104% 증가했다. 7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한 것은 물론 창사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 고지에 올라섰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광고, 커머스 사업 및 글로벌 유료 콘텐츠 사업의 높은 성장세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등이 포함된 신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이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팬더믹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디지털의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고 혁신적으로 서비스와 상품을 확대해가는 카카오만의 사업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올 3분기에 사실상 사상 첫 분기 매출 2조원 고지를 밟았다.

네이버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 3분기 매출은 1조3608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42%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지난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연속으로 고점을 경신한 것이다. 특히 네이버가 일본 계열사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건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라인 매출은 올 3분기부터 연결 매출에서 제외했는데 라인 매출까지 포함하면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 2조원(2조598억원)을 넘어서 눈에 띈다. 네이버 3분기 영업이익은 2917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8% 증가했다.

네이버는 이번 호실적에 대해 서치플랫폼, 커머스 사업 호조세와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신사업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한성수 네이버 대표는 "신성장동력인 커머스·핀테크·콘텐츠·클라우드 사업의 고른 성장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C그룹과의 파트너십 및 라인의 야후재팬과의 경영통합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한 것처럼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톡톡히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기존 사업의 고른 성장세는 물론 신사업까지 빠르게 확장함에 따라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다.

2020. 11. 06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출처 )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89801

( 요약 ) 中 겨냥한 바이든의 탄소국경세...韓 석유, 화학, 철강 '비상'

- 바이든 후보의 최우선 선거공약은 기후온난화 관련 정책으로 넷제로(Net Zero), 탄소국경세를 도입

- 탄소국경세 등 통상압박이 강해지면 한국은 1차적으로 배출이 높은 주력 수출 산업에서 제품 가격상승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든 후보가 내놓을 각종 환경 관련 정책이 한국 경제를 또 다른 격랑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늦췄던 것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탄소국경세'를 비롯해 강력한 환경 관련 정책을 미국 국내외에 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탄소 배출이 많은 중후장대형 제조업이 많은 한국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가 밝힌 선거공약 중 환경·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공약은 기후 온난화 관련 정책이다.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파리기후협약에 즉시 재가입할 것이며,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재정 1조 7000억달러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은 2020년부터 전 세계 국가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4일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할 계획이었지만 대선으로 인해 탈퇴가 미뤄지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이를 위해 미국 내에는 '2050년 넷제로(탄소 중립)'를, 미국과 교역하는 당사국들에는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0(중립)이 된다는 의미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새로운 관세 형태로, EU에서 준비하는 안은 국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자국 수출 기업에는 지원금으로 보전해주고 △타국 수입 기업에는 부담금을 추가로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탄소국경조정' 전략이다. 바이든 후보도 이를 참고로 해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후보가 저탄소 전략을 뽑아 든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속내에는 중국에 대해 '우회적 통상 압박'을 넣으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 의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강수였던

이달 4일 발효될 예정이던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취소하고 협약에 복귀

탄소 배출량(+)과 저감량(-)의 합을 0으로 만드는 '탄소 넷제로' 2050년까지 추진

2025년까지 탄소 배출 많은 국가나 기업 제품에 관세를 매겨 가격경쟁력 낮추기

기후변화 대응에 10년간 1조7,000억달러 지출

2030년까지 미국 내 50만개 이상 공공 전기차 충전소 보급

2035년까지 건물 에너지 효율 높여 탄소 발자국 50% 감축

파리기후협약 복귀

2050 넷제로 선언

탄소국경세 도입

기후변화 대응 투자

전기차 충전소 보급

주목 에너지 효율 제고

바이든 후보가 내건 환경 공약

'자료:조 바이든 당권후보 공약집'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취소하면 바이든 후보는 미국과 EU 간 기후 분야 공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탄소 저감 기술 및 친환경 발전에 더 오랜 기간 투자해온 EU와 협력해 중국에 새로운 형태의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세계 1위 탄소 배출 국가인 만큼 탄소국경세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국을 조준한 미국·EU의 새로운 패권 전략인 저탄소 정책이 한국에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보다 한발 빠르게 지난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60년까지 넷제로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중국이 넷제로를 선언한 것은 이전부터 준비해온 기술 상용화를 믿고 탄소 경쟁에서 자신감을 표한 것"이라며 "반면 한국 기업들은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국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통상 질서 도입에 한국만 '새우 등'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국경세 등 통상 압박이 강해지면 한국은 1차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수출 산업에서 탄소를 빌미로 관세를 물어야 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그 결과 제품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일반적인 생산 비용에 더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기술·설비 투자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생산단가 상승도 필연적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2050년까지 탄소 저감을 추진할 경우 국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에서만 최소 400조원의 전환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의 26.9%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탄소 배출이 많아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경고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의 넷제로는 선언만 앞섰고 실행 방안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본부장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산업은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이 상용화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기업이 당장 도입할 기술이 없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넷제로를 골자로 한 탄소 감축 계획을 올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기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75% 저감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는 사이 국회에서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부담을 크게 늘리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각 에너지원에 이산화탄소 환산 t당 7만 6000원의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이산화탄소 거래단가인 t당 2만 9126원(2019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일각에서는 아직 탄소국경세 등의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전략팀장은 "EU 내에서도 나라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입장이 달라 어떤 형태로 국경세가 부과될지 구체화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2020. 11. 06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출처 ) 신문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1378214>

( 요약 ) 바이든 유력...수출엔 호재, WTO 사무총장은 가물가물

-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상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바이든은 확실한 호재. 총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2% 늘어  
- 바이든 후보의 이전 재임시절을 보면 다자간 협상을 선호하는 성향이 드러난다

### 조 바이든 후보 당선에 따른 한국 경제 파급 효과

경제·산업	재정지출 확대, 중산층 임금 인상 등에 의한 미국 경제 회복세 기대. 이에 따라 한국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1~0.4% 포인트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임
무역	국제통상질서 존중하는 분위기 따라 세계 교역 개선 기대. 한국 수출 여건 양호해짐.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0.6~2.2% 포인트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인프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의 투자 기회 발생
통화정책	연방준비제도의 저금리 기조 유지 예상됨에 따라 한국도 완화적 통화정책 여건 형성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한국 통상 당국은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상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확실한 호재다.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총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최대 2.2% 포인트 더 늘어난다는 분석**도 내놔다. 반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결선에 오른 유명히 통상교섭본부장의 시계(視界)는 흐릿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각에서 발표했던 지지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시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정부처럼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울 가능성은 낮다. **미 연방 상원의원 외교위원장, 부통령 재임 당시를 되짚어보면 다자 간 협상을 선호하는 성향이 드러난다.** WTO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주의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철회한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복귀와 함께 유럽과 함께하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미중 관계도 호전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5일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세를 바로 철회는 안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수출 장벽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후보 당선 효과로 한국의 총수출이 연평균 0.6~2.2% 포인트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연간 0.1~0.4% 포인트 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의 토대이기도 하다.

악재도 있다. 신임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오른 유 본부장의 거취 문제다.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고지 오크조이웨알라 나이지리아 후보보다 뒤처졌다. WTO 관례상 선호도에서 밀린 후보가 사퇴하면 최종 후보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면서 사무총장이 탄생한다. 하지만 미국이 유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 과정이 꼬였다. 정부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었다.

이 상황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급변했다. 아직 대통령 취임 전이고 내각도 갖추지 못했다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 미국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유 본부장이 사퇴 시점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분간 신임 통상교섭본부장 인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